

빅데이터로 살펴본
미중 평화관계
분석 및 함의:
2013-2020

유기은 · 정승철 · 한동균
(제주평화연구원)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빅데이터로 살펴본
미중 평화관계 분석 및 함의:
2013-2020

▶▶▶ | 목차

I. 들어가며	8
II. 빅데이터로 살펴본 미중 평화관계: 2013-2020	10
III. 미-중 간 평화 관계: 미국의 시각	18
1.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Asia) 정책	18
2. 미중 무역전쟁	20
3. COVID-19 중국책임론	22
IV. 미중 관계에 대한 중국의 시각	24
1. 중국몽과 신형대국관계	24
2. 미중 무역분쟁	26
3. 코로나19 책임론	27
4. 홍콩 민주화 시위 및 소환법 통과	28
V. 결론 및 함의	31
참고문헌	32

본 연구는 빅데이터와 양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미중 간의 평화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서는 오바마 2기와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했던 2013년부터 2020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언론에 드러난 미중간 평화 관계를 골드스타인 스케일(Goldstein Scale)을 이용해 분류하고 전체적 평화 관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시진핑-오바마 시기(2013-2016)와 비교할 때, 시진핑-트럼프 시기(2017-2020)의 미중관계가 크게 악화되었다. 둘째, 미중관계의 변화 추세를 정치관계, 경제관계 그리고 북핵문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미중 간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들어서 오바마 행정부 시기 때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다만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는 미중 간에 2017-2018년 동안 긍정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으나 2019-2020년에 들어서는 거의 중립적인 상태이다.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미중 간 갈등·협력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준 원인들을 추적하였다. 시진핑-오바마 시기에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와 중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고자 한 미국의 태도로 미중간 갈등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트럼프 시기에는 2018년부터 21개월간 지속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중 간 경제적 갈등이 첨예화되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제기되고 홍콩민주화 시위를 둘러싼 대립까지 더해져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키워드 : 미중관계, 빅데이터, 골드스타인 스케일,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중국책임론

I. 들어가며

세계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냉전이 끝난 이후 세계 유일의 패권국으로 군림해오던 미국은 2000년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군비를 지출하였고 2008-09년 세계금융위기가까지 겹치면서 엄청난 양의 국가부채를 짊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의 패권은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미국을 따라잡았다. 2019년 세계은행 기준 미국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약 21.3조 달러, 중국은 약 14.3 달러이다.¹⁾ 반면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 기준 국내총생산은 중국이 약 23.4 달러로 미국의 약 21.4조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²⁾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혹은 이미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 오늘날 우리는 미중 양강 체제인 G2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강 체제 하에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두 강대국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이 두 국가 사이의 관계가 자신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한 중국과의 대규모 무역전쟁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과 협력 관계 변화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다만, 그동안 미중관계에 관한 연구는 (특히 국내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주로 이용해왔다. 질적 연구 방법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하였던 특정 사건, 무역 혹은 북핵문제 등 특정 이슈가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층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할 경우 어느 해에 미중관계가 다른 해보다 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연도별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및 협력이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표현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는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빅데이터와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2013년부터 2020년

1) World Bank Data. n.d. GDP(current U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view=chart>.

2) World Bank Data.. n.d. Gross domestic product 2019, PPP. https://databank.worldbank.org/data/download/GDP_PPP.pdf.

(10월)까지 했수로 지난 약 8년 동안 미중 간의 갈등 및 협력 관계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수치화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축된 미중관계 변화 추세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각 연도별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심층분석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제 II 장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미중관계를 어떻게 수치화하고 측정하였는지에 대한 방법론과 그 결과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제 III 장에서는 제 II 장에 나타난 미중관계 변화 추세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IV 장에서는 본 연구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추후 보다 발전된 연구를 행하기 위해 본 연구결과물이 수정·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II. 빅데이터로 살펴본 미중 평화관계: 2013-2020

본 연구의 목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중 간의 갈등 및 협력 추세를 수치화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로는 한국 주요 언론의 기사들을 이용할 계획이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언론에 드러난 미중관계 변화 추이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미중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언론을 이용하는 이유는 한국인이 주로 미국과 중국의 언론이 아닌 한국의 언론을 통해 미중 간에 벌어지는 사건(event)들을 접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미중관계에 대한 한국인들이 인식이 한국의 언론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언론이 보도한 미중관계 관련 기사들을 통해 2013년부터 2020년(10월)까지의 그 관계를 측정할 것이다.

연구대상 기간을 2013년부터 2020년(10월)까지로 정한 이유는 시진핑 현 중국 주석이 집권한 연도가 바로 2013년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에 임기를 마치고 2017년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기간을 2013년부터 2020년(10월)으로 설정하여 한편으로는 시진핑 집권 시기 동안 미국에 대한 중국의 행동과 태도는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행동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빅데이터 구축에 앞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한 “사건(event)”들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해야 한다. 미중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양국 사이에 발생한 각 사건의 경중에 따라 이에 부여하는 수치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아자르(Edward E. Azar)의 정의를 차용하였다:

“Each event record contains variables describing the actions, reactions, and interactions of nation-states. These events are occurrences between nations which are distinct enough from the constant flow of “transactions” (trade, mail flow, travel, and so on) to stand out against this background as “reportable” or “newsworthy.” Thus, to qualify as an “event,” an occurrence has to be actually reported in some reputable and available public source. For example, the conclusion of a trade agreement would qualify as an “event,” but the subsequent individual and routine trade exchanges conducted under its term would not.” (Azar 1980, 146)

즉 아자르에 의하면 사건이란 국가 간에 발생한 상호작용, 특정 국가가 상대 국가에 취한 행동, 이에 대한 상대 국가의 반응 등을 포함한다. 다만 그 상호작용, 행동, 반응 등은 국가 간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거래 혹은 교류와는 달리 권위 있는 언론에 보도될 가치가 있을 정도로 중대한 행사 혹은 사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아자르의 정의에 의하면 국가 간에 무역협정을 맺는 일은 사건으로 간주되지만 이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국가 간의 무역과 거래는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zar 1980, 146).

이처럼 국가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 행동, 반응 등을 사건으로 분류할 것인지 그 여부는 그 상호작용, 행동, 반응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미중 관계 측정에 사용될 한국의 언론으로는 한겨레, 한국일보, 그리고 중앙일보를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수많은 언론이 존재하지만 이 세 언론사를 택한 이유는 첫째, 언론기사 수집을 위해 사용한 뉴스분석 서비스 빅카인즈(BIGKinds)에서 2013년부터 기사를 제공하는 중앙지로 한겨레, 한국일보, 그리고 중앙일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수 언론으로 꼽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경우 빅카인즈에서 2018년 이후의 기사들만 제공하기에 본 연구에는 이들 중앙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둘째, 선정된 언론사들 간 정치적 시각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언론기사들은 국가 간에 발생한 사건들을 수집하기 위함이지 특정 언론사가 그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보도 및 평가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정치적 편향성은 기사 수집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언론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특정 사건 자체가 보도되고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있을 수 있기에 특정 편향성을 지닌 언론들만을 선택할 경우 수집된 사건들 또한 미중 관계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고 편향성을 띠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균형 잡힌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의 보수, 중립, 진보를 대표하는 언론사인 중앙일보, 한국일보, 그리고 한겨레를 선정하여 기사를 수집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목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미중관계를 수치화하고 측정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각 언론에 나타난 사건을 수집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우리가 주목한 것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보도가 각 언론사에 몇 차례씩 나타났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이에 대한 기사는 언론사마다 수십개씩 보도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미중 정상회담이 몇 차례 열렸는지, 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양국은 합의를 하였는지 협상이 결렬되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언론사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해 수십여 차례 보도가 되었다라든가 우리는 그 사건이 단 1회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실제로 그

이벤트는 현실에서 1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사에서 보도한 사건에 기반하여 국가 간 갈등 협력 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우선 이 자료는 언론사에 의해 선별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사건들은 분석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진다. 언론 보도는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는 모든 정치, 경제적 사건을 모두 담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언론사의 판단에 따라 시의성 있고 중요한 사건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보도하기 때문에 샘플의 편향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본 논문은 한국의 신문 보도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의 시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미-중 간 사건을 더 잘 포착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건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단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언론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도 언급했듯 본 연구는 ‘사건’을 권위 있는 언론에 보도될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정의한다. 양국 간에 발생한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을 연구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미중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달라 사건마다 가중치를 달리해야 하는 등 분석의 복잡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변수가 생겨나게 된다. 언론사에 보도된 사건들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진보,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언론사를 하나씩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정치적 시각으로 인해 한 언론사에서 고의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사건들도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수집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미국, 중국의 언론사가 아니라 한국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 있지만, 이것은 반대로 미-중 관계에 대한 한국의 고유한 시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 미-중 간 정치외교, 경제 관계 사건들 가운데 한국의 입장에서 특히 중요하여 한국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은 한국 국민들이 미-중 관계를 인식하게 되는 자료가 될 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수립하는 대미, 대중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한국 언론 보도에 드러난 미중관계를 분석하는 본 연구는 미중관계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외교정책 연구로 확장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 간에 발생한 각 사건은 <표 1>에 소개된 골드스타인 스케일(Goldstein scale)에 따라 분류되고 수치화되었다. 골드스타인 스케일은 각 사건의 갈등 및 협력 수준에 따라 이를 61단계로 분류하여 -10.0에서 8.3까지의 점수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골드스타인 스케일에 의하면 국가 간에 가장 큰 갈등 단계는 “군사 공격 및 충돌 (Military attack; clash; assault)”로 -10.0을 부여하고 가장 협력적인 단계는 “확장된 군사 지원

(Extended military assistance)”로 8.3을 부여한다. 이 외에도 “경고하다(Give warning)”은 -3.0, “예정된 행사를 취소 혹은 연기하다(Cancel or postpone planned event)”는 -2.2, “물질적 지원을 요청하다(Ask for material assistance)”는 3.4, “물질적 지원을 약속하다(Promise material support)”는 5.2 등 각 사건에 부여된 갈등·협력 점수는 그 경중에 따라 다양하다.

<표 1>. 이벤트 분류에 사용한 Goldstein Scale
TABLE 1. New Weights for WEIS Events

	Event Type	Weight	SD
223	Military attack; clash; assault	-10.0	0.0
211	Seize position or possessions	-9.2	0.7
222	Nonmilitary destruction/injury	-8.7	0.5
221	Noninjury destructive action	-8.3	0.6
182	Armed force mobilization, exercise, display; military buildup	-7.6	1.2
195	Break diplomatic relations	-7.0	1.3
173	Threat with force specified	-7.0	1.1
174	Ultimatum; threat with negative sanction and time limit	-6.9	1.4
172	Threat with specific negative nonmilitary sanction	-5.8	1.9
193	Reduce or cut off aid or assistance; act to punish/deprive	-5.6	1.4
181	Nonmilitary demonstration, walk out on	-5.2	2.1
201	Order person or personnel out of country	-5.0	1.7
202	Expel organization or group	-4.9	1.4
150	Issue order or command, insist, demand compliance	-4.9	1.7
171	Threat without specific negative sanction stated	-4.4	1.5
212	Detain or arrest person(s)	-4.4	2.3
192	Reduce routine international activity; recall officials	-4.1	1.2
112	Refuse; oppose; refuse to allow	-4.0	1.5
111	Turn down proposal; reject protest, demand, threat	-4.0	1.5
194	Halt negotiation	-3.8	0.9
122	Denounce; denigrate; abuse	-3.4	1.1
160	Give warning	-3.0	1.3
132	Issue formal complaint or protest	-2.4	0.9
121	Charge; criticize; blame; disapprove	-2.2	1.3
191	Cancel or postpone planned event	-2.2	1.5
131	Make complaint (not formal)	-1.9	0.6
063	Grant asylum	-1.1	2.5

Event Type		Weight	SD
142	Deny an attributed policy, action, role or position	-1.1	1.0
141	Deny an accusation	-0.9	1.3
023	Comment on situation	-0.2	0.5
102	Urge or suggest action or policy	-0.1	1.5
021	Explicit decline to comment	-0.1	0.6
094	Request action; call for	-0.1	1.0
025	Explain or state policy; state future position	0.0	0.0
091	Ask for information	0.1	0.4
011	Surrender, yield to order, submit to arrest	0.6	7.2
012	Yield position; retreat; evacuate	0.6	6.6
031	Meet with; send note	1.0	0.9
095	Entreat; plead; appeal to; beg	1.2	1.8
101	Offer proposal	1.5	1.9
061	Express regret; apologize	1.8	1.5
032	Visit; go to	1.9	2.4
066	Release and/or return persons or property	1.9	2.7
013	Admit wrong doing; apologize, retract statement	2.0	2.2
062	Give state invitation	2.5	2.7
054	Assure; reassure	2.8	2.2
033	Receive visit; host	2.8	3.0
065	Suspend sanctions; end punishment; call truce	2.9	3.6
082	Agree to future action or procedure, to meet, or to negotiate	3.0	2.5
092	Ask for policy assistance	3.4	1.1
093	Ask for material assistance	3.4	2.4
041	Praise, hail, applaud, extend condolences	3.4	2.1
042	Endorse other's policy or position; give verbal support	3.6	1.8
053	Promise other future support	4.5	1.6
051	Promise own policy support	4.5	1.7
052	Promise material support	5.2	1.5
064	Grant privilege; diplomatic recognition; de factor relations	5.4	1.4
073	Give other assistance	6.5	1.9
081	Make substantive agreement	6.5	1.4
071	Extend economic aid; give, buy, sell, loan, borrow	7.4	1.0
072	Extend military assistance	8.3	0.9

NOTE: Weight is mean of weights assigned by eight panelists; SD is standard deviation across panelists.

Source: (Goldstein 1992, 377-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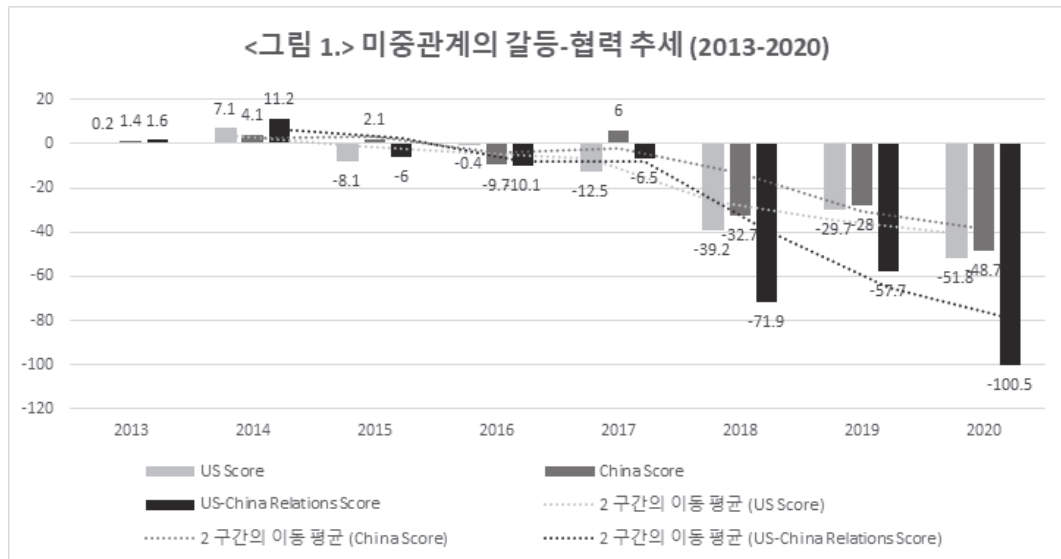
<표 2>. 연도별 미중 간에 발생한 사건 수 및 각 언론에 보도된 사건 횟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미중 정치 관계	5		7		7		11		26		14		16		43		129	
북핵문제	15		4		0		8		34		22		2		1		86	
무역문제	1		0		1		3		10		46		45		13		119	
기타	2		1		3		0		3		0		2		1		12	
이벤트 유형	미 국		중 국		미 국		중 국		미 국		중 국		미 국		중 국		미국 (2013- 2020)	중국 (2013- 2020)
	9	7	1	3	7	2	8	10	22	17	28	25	20	19	23	25		
부정적 이벤트	3	1	1	1	0	1	2	0	3	6	10	5	14	1	8	0	41	15
중립 이벤트	7	6	6	6	2	2	7	8	24	26	18	21	12	13	8	5	84	87
긍정적 이벤트																		
보도 언론																		
한겨레	11		6		7		9		31		29		27		10		130	
한국일보	12		7		6		16		37		38		39		39		194	
중앙일보	8		4		5		9		48		55		44		40		213	
중복	7		5		5		9		29		34		33		26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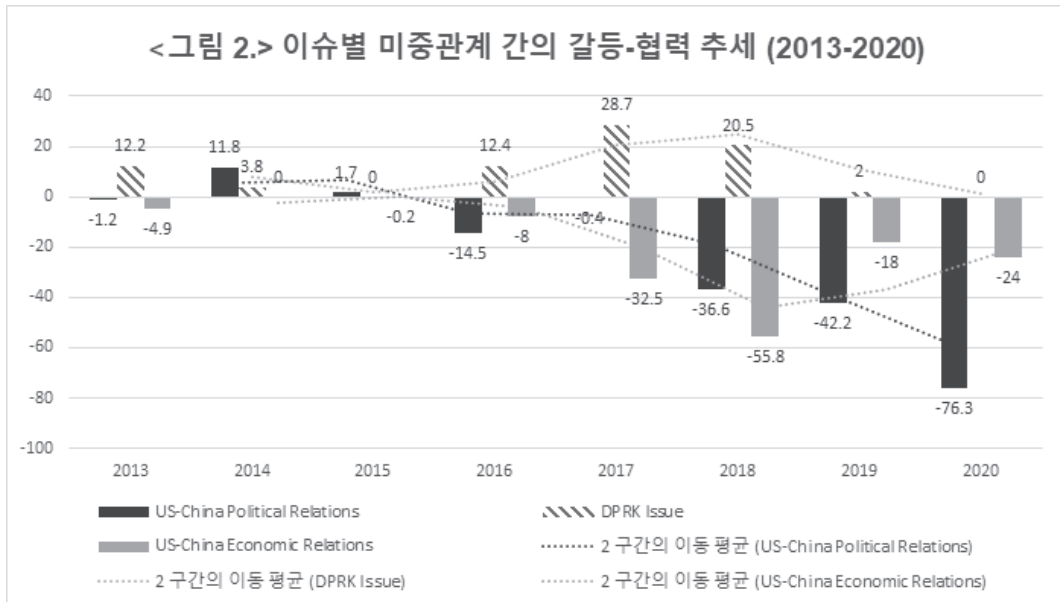
위와 같이 <표 1>에 소개된 골드스타인 스케일을 사용하여 2013년부터 2020년(10월)까지 미중 간에 있었던 사건을 수집 및 분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 가운데 한 해에 미국이 중국에 행한 행동 및 중국에 보인 태도와 관련된 사건들에 부여된 점수를 모두 합하여 얻은 수치에는 US Score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반대로 한 해에 중국이 미국에 행한 행동 및 미국에 보인 태도와 관련된 사건들에 부여된 점수를 모두 합하여 얻은 수치에는 China Score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정 연도의 US Score와 China Score를 합한 수치는 US-China Relations Score라고 이름 지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US Score와 China Score는 각각 -39.2와 -32.7이기에 2018년 US-China Relations Score는 -71.9가 되는 것이다.

매년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갈등적 혹은 협력적 사건이 다양한 빈도로 발생한다. 하지만 특정 연도의 US Score와 China Score가 양수(+)인 경우 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행동 및 태도가, 그리고 미국에 대한 중국의 행동 및 태도가 각각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특정 연도의 US Score와 China Score가 음수(-)인 경우 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행동 및 태도가, 그리고 미국에 대한 중국의 행동 및 태도가 각각 전체적으로 부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만약 특정 연도의 US Score와 China Score가 0.0이라면 이는 각 국가가 그 해에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행동과 태도를 보였다고 해석 가능하다.

각 연도별 수치의 절대값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행동 및 태도의 정도(degree)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US Score와 China Score를 합한 US-China Relations Score가 양수(+)인 경우 해당연도의 미중관계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음을, 음수(-)인 경우 해당연도의 미중관계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1>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미중관계는 시진핑-오바마 시기(2013-2016)와 시진핑-트럼프 시기(2017-2020)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시진핑 시기 전반부(2013-2014)의 미중관계는 중립에 가깝지만 긍정적이었다. 비록 오바마-시진핑 시기 후반부(2015-2016)의 미중관계는 다소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 정도는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시진핑-트럼프 시기에 들어서면서, 특히 2018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개시하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중국에 묻는 등의 행보를 보임에 따라 미중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2>에서는 전체적인 미중 관계의 변화 추세를 정치관계, 경제관계, 그리고 북핵 문제 등 각 영역과 이슈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정치관계는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 및 장관급 인사 등이 전 세계 각종 현안에 대해 양국이 협력 혹은 대립한 사건들을 포함하였다. 경제관계에는 양국 간 무역 혹은 환율 등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핵문제 이슈는 북핵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어떤 합의 혹은 갈등, 상호비난 등을 하였는지를 포함한다.

<그림 2>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미중 간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2017-2020) 들어서 오바마 행정부 시기(2013-2016) 때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다만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는 미중 간에 2017-2018년 동안 긍정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으나 2019-2020년에 들어서는 거의 중립적인 상태이다.

지금까지 빅데이터(한국 주요 언론의 기사)를 사용하여 구축한 2013년부터 2020년(10월)까지의 미중 관계 변화 추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 본 연구는 두 행정부 사이의 확연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 원인을 주요 사건을 통해 추적한다. 위의 데이터 분석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기 동안 미국의 관점에서 본 미중 평화관계와 중국의 관점에서 본 미중 평화관계를 분리하여 살펴보고, 데이터 분석에서 드러난 결과를 좀 더 심층적으로 설명한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먼저 국의 관점에서 본 미중 평화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주요 정책 기조와 사건을 통해 분석해 본다.

Ⅲ. 미-중 간 평화 관계: 미국의 시각

앞에서 살펴보았듯, 지난 8년간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변화되어왔으며, 특히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 대중국 태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그 차이는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기사화된 미국-중국 간 이벤트 수에 있어 트럼프 시기 미-중 간 보도된 주요 사건의 수가 현저히 많았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주요 보도로서 본 연구에 집계된 사건 수는 오바마 2기 동안 연평균 13회에 그친 반면, 트럼프 시기에는 그 세 배가 훌쩍 넘는 연평균 47회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중복되는 내용의 보도를 제외한 값이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 협력을 불문하고 오바마 2기-시진핑 시기 때보다 트럼프-시진핑 시기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보도될만한 사건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트럼프 시기, 특히 2018년 이후 확연히 악화되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를 수치화한 US score를 비교해 보면,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는 최고 7.1 (2014년), 최저 -8.1 (2015년)을 기록하며 대체로 중립적인 대중국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들어서며 첫 해에 -12.5로 출발한 US score가 2018년에는 -39.2, 2019년에 -29.7, 2020년에는 -51.8의 수치를 보이며 크게 악화되었다.

셋째, 이슈별 평화 관계를 보면 트럼프시기 미중의 갈등 관계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는 크게 2018년 미중 무역전쟁과 2020년 코로나 중국 책임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2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에는 경제 이슈에 대한 부정적 관계가 두드러지는 반면, 2019년과 2020년에는 경제적인 갈등은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미중간 정치적 이슈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북한문제에 관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관계가 두드러지며, 오바마 행정부 시기보다 훨씬 적극적인 태도로 북한 문제에 양국이 협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Asia) 정책

중국의 빠른 부상으로 아시아 내에서 미국의 위상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했으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또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Asia)” 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중동의 이라크와 이란에서 치른 두 전쟁을 종식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높이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자칫 중국에게 공세적인 태도로 읽힐 수 있으나 오바마 행정부

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2009년 7월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파트너십은 “전 세계의 가장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³⁾이라고 강조했다며, 이후 2011년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양국의 다양한 차이와 이견에도 불구하고 미중관계의 강화를 통해 아시아와 세계의 당면과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의지를 표명했다⁴⁾.

미국은 당면한 미국 국내의 문제들과 세계 경제위기와 침체, 기후변화, 핵 확산방지와 테러 등의 과제들을 우선시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과는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고⁵⁾,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국은 중국의 평화적인 부상을 유도하고 중국과의 충돌을 최소화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미·중관계가 필요했으며, 미국은 중국을 ‘길들이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중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지양해왔다고 볼 수 있다.

양국 간 갈등은 분명 존재했다. 예컨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사이버해킹에 대한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2013년 3월, 미국 의회가 중국의 해킹 의혹에 대한 대응조치로 2013 회계연도 예산법안에 연방정부의 중국산 정보기술 제품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은 것을 시작으로⁶⁾,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 대표단 앞에서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 기준에 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⁷⁾. 미국 법무부가 2014년 5월 미국 기업들을 해킹한 혐의로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 5명을 기소했으며⁸⁾ 그로부터 1년 후 현직 교수를 포함한 중국인 6명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했다.⁹⁾ 2015년에는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2015년 5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참모들에게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부근에 건설하고 있는 인공섬으로부터 12해리 안쪽까지 미 해군 정찰기와 군함을 보내는 것을 검토해보라

3)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July 27, 2009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remarks-president-uschina-strategic-and-economic-dialogue>>.

4) The White House. “U.S.-China Joint Statement.” Washington, D.C.. (January 19, 2011).

5) Sutter, Robert. “Barack Obama, Xi Jinping and Donald Trump—Pragmatism Fails as US-China Differences Rise in Prominence.” *American Journal of Chinese Studies* (2017): 69-85. pp.71-72

6) “미국 의회, 중국산 IT제품 구매 중단 조치”, 『한국일보』 (2013.03.28).

7) “정상회담 앞둔 미-중 ‘해킹’ 신경전 노골화”, 『한겨레』 (2013.06.02).

8) “미, 중국군 ‘경제 스파이’ 5명 기소”, 『한겨레』 (2014.05.20).

9) “미국, 중국인 6명 산업스파이 혐의 기소” 『한겨레』 (2015.05.20).

고 지시했으며¹⁰⁾ 10월에는 미국 해군 구축함이 전격적으로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약 22.2km) 안을 향해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¹¹⁾

하지만 이러한 갈등들이 두 국가의 정면대결로까지 번지지는 않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평화적 관계와 설득을 통한 파트너십을 추구하였고, 뒤에서 사색히 살펴볼 시진핑 정부의 ‘신형대국관계’에도 동의, 협조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중 간의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2. 미중 무역전쟁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취했던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적극적인 중국 견제 정책을 취했다. 특히, 심화되어 가는 대 중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은 중국과의 교역관계 재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폭스뉴스,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하며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2017.1.15. 한국일보). 취임 이후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일단락 되었지만 중국의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양안관계를 문제 삼으며 트럼프 임기 중 미중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첫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CED)’가 2017년 7월에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으며, 11월 미국 재무부 데이비드 말패스 차관은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포괄적 경제대화가 교착상태에 있다며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¹²⁾. 미국 행정부가 12월 18일 내놓은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로 규정하고 무역 경제 의제를 앞세웠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에 대해 “위반, 속임수, 경제적 침공에 더는 눈 감지 않겠다”며 미-중 간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¹³⁾

결국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부과와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이른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림3>에 요약되어 있듯이 미국은 7월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

10) “중국 인공섬 건설 도 넘었다” 압박 강화 미국, 남중국해에 군함 파견 검토”, 『한겨레』 (2015.0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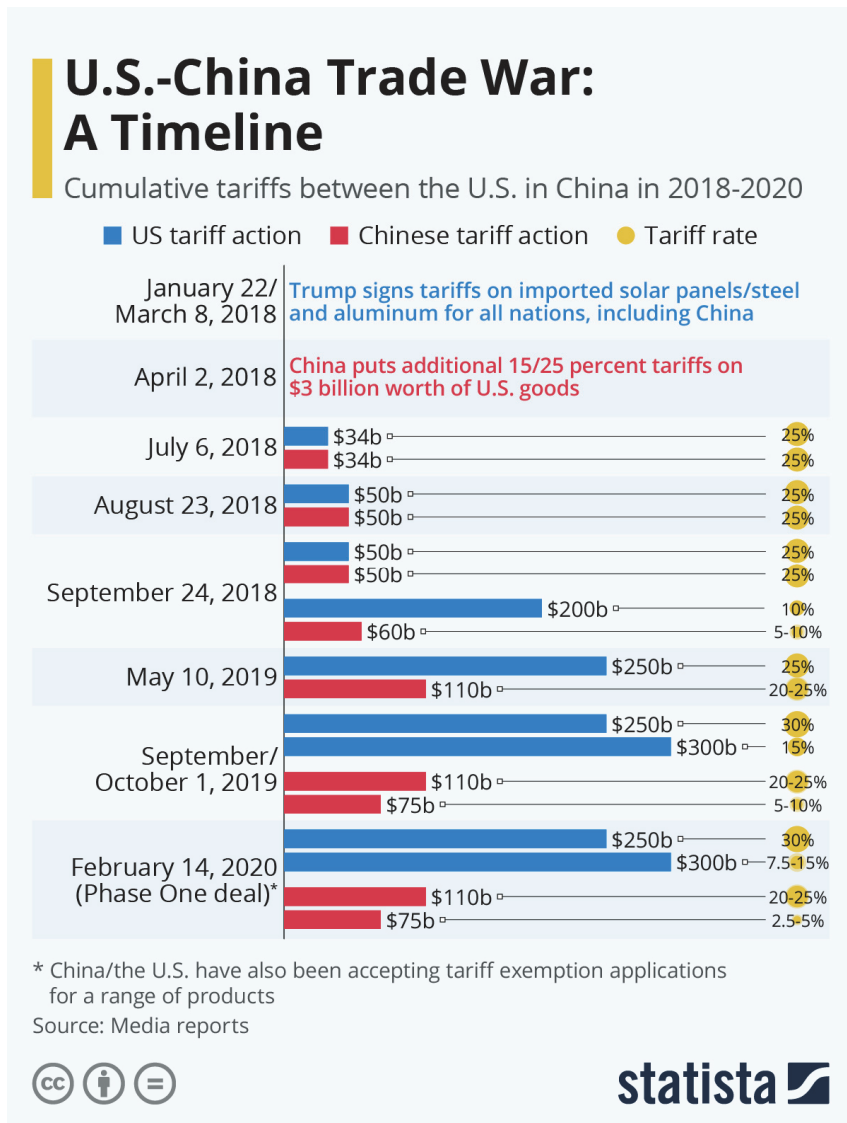
11) “[단독] 미 군함 인공섬 해역 첫 진입 오바마, 시진핑과 설전 뒤 지시”, 『중앙일보』 (2015.10.28).

12) “미-중 포괄적경제대화 사실상 중단”, 『VOA 뉴스』 (2017.12.01).

13) “트럼프 ‘중국도 러시아도 라이벌’ 다시 시작된 파워게임”, 『한국일보』 (2017.12.19).

품 818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부과를 개시했고, 8월에는 500억 달러 (한화 약 56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도 같은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이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9월에는 미국이 2,000억달러(약 224조7,000억원)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같은 날 600억달러(약 67조4,100억원)어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¹⁴⁾

<그림 3> 미중 무역전쟁 타임라인



출처: Statista, <https://www.statista.com/chart/15199/us-chinese-trade-war-escalates/>

14) “미국 2000억불 관세 폭탄에 중국 600억불 관세 맞불”, 『한국일보』 (2018.09.18).

미-중 간 무역전쟁은 다른 경제적, 비경제적 이슈에서의 갈등과 맞물리며 장기화 되었다. 2019년 5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겨냥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2019년 8월에는 중국의 환율조작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관세율을 또 한 차례 올리기도 하였다. 두 국가의 갈등은 홍콩 시위 사태와 맞물려 정점에 이르렀다. 홍콩입법회에서 범죄인 인도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면서 2019년 6월부터 홍콩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중국 정부의 홍콩 시위 무력 진압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홍콩 시위대를 ‘텐안문(天安門) 방식’으로 탄압할 경우 양국 간 무역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년에는 중국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법률 제정에 서명하였다.¹⁵⁾

2019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이 합의에 이르고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21개월째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이 잠정적인 휴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림 2>에서 2017년과 2018년에 급격히 심화된 경제부문 미중 간 갈등관계가 2019년과 2020년에는 비교적 완화되는 것은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락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여전히 두 국가 간의 경제적 긴장관계는 계속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위챗’과 ‘틱톡’ 등의 어플 차단을 추진하는 등 IT업계에서의 갈등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

여전히 부정적인, 그러나 상대적으로 완화된 경제 관계와 달리 미-중 간 정치이슈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악화일로를 걸었으며 특히 <그림2>의 2020년 “US-China relations”는 -76.3의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보도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2020년 미중 관계의 악화는 코로나19 (COVID-19)의 전세계적 유행에 대한 중국 책임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COVID-19 중국책임론

2020년 1월 미중 1단계 무역협상으로 두 대국 간 무역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를 둘러싼 미-중 간 비방이 심화되었다. 미국은 “중국이 전염병을 은폐해 전 세계가 대가를 치른다”고 공격하면서 전염병확산의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켰다.¹⁶⁾

15) “[속보]트럼프, 홍콩 인권법 서명”, 『한국일보』 (2019.11.28.).

16) “美 “중국이 은폐”, 中 “편파적 이중잣대” G2 코로나 비방전 가열“ 『한국일보』 (2020.03.12).

이러한 비방은 미국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하루 3만 명을 넘어서게 된 4월에 이르자 더욱 격화되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팬데믹 통제와 방역에 대한 무능력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사망자 통계 조정, ‘코로나19 우한 실험실 유출설’을 거론하며 팬데믹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¹⁷⁾ 6월에 백악관에서 진행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은) 고의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중국이 경쟁국들의 경제를 파괴하기 위해 일부러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다는 것이다.¹⁸⁾

7월에 이르러서 미국의 COVID19확진자는 하루 5만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심각해졌고 중국 책임론은 더욱 강화된다. 9월 22일 유엔 총회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팬데믹 확산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를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중국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맞대응했다.¹⁹⁾

팬데믹의 확산이 미국 국내 경제와 여론에 큰 타격을 주면서 코로나19의 발생국인 중국이 큰 비난을 받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팬데믹 확산의 중국 책임을 물으며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더 냉각되었다. <그림 1>의 미-중 갈등 협력 추세를 볼 때,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인 US Score와 중국의 미국에 대한 태도인 China Score가 모두 2020년에 최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양국이 정면충돌했던 2018년과 2019년보다 더 높은 갈등 수준을 기록했으며, 결국 이렇게 중국과의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트럼프 행정부가 막을 내리게 된다.

이상으로 미-중간 갈등협력관계의 변화를 미국의 시각에서 논의해보았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같은 시기의 미중 관계를 중국의 관점, 중국의 미국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17) “트럼프 ‘코로나19 우한 실험실 유출 의혹 타당’ 中 고의 있다면 책임져야”, 『한국일보』 (2020.04.19).

18) “Transcript of President Trump’s Interview With The Wall Street Journal”, *The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articles/transcript-of-president-trumps-interview-with-the-wall-street-journal-11592501000>

19) “트럼프, 유엔연설서 ‘中, 코로나 책임져야’ 시진핑 ‘정치화 안돼’”, 『중앙일보』 (2020.09.23).

IV. 미중 관계에 대한 중국의 시각

2012년 11월 출범한 시진핑 총서기 체제는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국제적 위상을 갖추고 미국과 함께 국제질서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외교정책의 성격과 방향이 주목되었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신형 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제시하며 중국의 강대국 외교정책을 예고한 바 있으며, 2013년 초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까지 맡는 등 당·정·군의 모든 권력을 거머쥐는 시진핑 시대를 개막했다. 또한, 집권과 함께 ‘두 개의 100년(兩介一白年)’ 목표라는 ‘중국몽(中國夢)’과 21세기 신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첨단기술 강국을 향한 ‘중국제조 2025’ 추진 등 그야말로 전 세계에 중국의 글로벌 부상을 알리며, 국내외적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대한 일련의 장기적인 국가대전략 구상을 천명해왔다.

특히,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과 겹치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 1기에는 국내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을 공고화하면서 대외적으로 ‘대국굴기(大國屈起)’를 통해 위압적이고 공세적인 대외팽창 정책을 추구하였고, 이는 기존의 글로벌 패권국인 미국과 역대 국가들로부터 소위 ‘중국위협론’을 더 크게 확산시키는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였다. 더욱이 중국 국내 정치적으로 중화민족의 단합과 일체화를 이룬다는 명분 하에 ‘중화민족주의’를 확산시키며 홍콩 민주화 시위마저도 강경하게 처리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과연 중국의 글로벌 부상과 영향력 증대가 전 세계와 역내에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동할지, 아니면 미중 패권경쟁을 촉발시키면서 역내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국들은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였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현재까지 미중 패권경쟁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세계화 시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은 코로나를 계기로 더욱 관계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미중관계 갈등 및 협력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미중간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몽과 신형대국관계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몽은 중국정치에서 중요한 개념이자 정치 담론의 핵심 키워드가 되었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직으로 선출된 직

후인 2012년 11월 29일 베이징 국가박물관에서 ‘부흥의 길(復興之路)’을 참관하는 자리에서 담화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중국몽을 언급하였다. 이 담화에서 중국몽과 관련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근대 이래 가장 위대한 중화민족의 꿈”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곧 다른 모든 꿈에 앞서는 ‘중국의 꿈’이라고 주장하였다²⁰⁾. 이후 2013년 3월 공식적으로 중국 국가주석이 된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제12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中國共產黨第十二屆中央委員會第一次全體會議)’ 폐막식에서는 중국몽에 대한 내용과 실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²¹⁾.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국가부강과 민족진흥, 인민행복을 실현하는 것으로 반드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과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시대정신을 갖춰야 하며, 중국의 모든 인민이 단결해 만들어 나가는 역량 등 ‘3개 필수(三介必須)’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근대 이래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으로 규명하면서 현재까지 중국몽은 중국의 정치적 담론에서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고, 현재에도 중국의 많은 이슈들이 중국몽이라는 거대담론 아래, 하나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은 국제체제에서 자국의 변화된 위상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규정하는 인식 변화에서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해왔다. 2012년 2월 시진핑 부주석 재직 당시 미국을 방문해 ‘중국이 비록 개도국이고 미중 간 국력과 국제질서에서 지위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적 관계로 두 나라 협력 없이는 아태지역은 물론 세계평화도 담보할 수 없다.’는 중국 측 입장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하며 ‘신형대국관계론’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후 2012년 5월 ‘제4차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는 미중 협력은 미중 양국과 세계에 커다란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반대로 미중 갈등은 미중 양국과 세계에 큰 손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에 협력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추진하고 전 세계가 안심할 수 있는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²²⁾. 이러한 신형대국관계론은 2013년 6월 7일부터 이틀 간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제5차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 다음의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²³⁾. 첫째는 ‘불충돌(不衝突), 불대항(不對抗)’으로 파트너십을 강조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과 이견을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는 ‘상호존중’으로 상대방의 사회제도와 핵심이익을 존중하며 구동존이를 원칙으로 포용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셋째는 ‘윈-윈’ 구도의 추구이다.

20) 程宏毅、杨丽娜. 2012. 习近平：承前启后继往开来 朝着中华民族伟大复兴目标奋勇前进 人民网 11月30日

21) 周楚卿、惠梦. 2013. 习近平：在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上的讲话新华网 3月 17日

22) 门洪华, 构建新型国际关系：中国的责任与担当, 世界经济与政治, 2016年 第3期, pp. 5-6.

23) 魏政, 2013 杨洁篪《求是》撰文论中国外交：开局体现战略性, 东方网 8月 16日.

결국 신형대국관계는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서 미국과의 협력 보장 및 중국의 자주성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중국이 제기한 신형대국관계론은 미국이 주도하는 틀 내에서 중국이 책임 있는 강대국 역할을 하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rebalancing toward Asia)’에 대한 고차원적 대응으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호존중과 협력, 윈-윈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며, 이는 각자의 핵심 이익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지역 및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 협력하자는 주장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⁴⁾.

2. 미중 무역분쟁

미국은 서비스 분야 흑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도 기준 전체 상품 무역적자의 절반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비시장국가인 중국이 독점력을 이용하여 공정한 무역을 방해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불평등확대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국내 구조적인 문제도 이와 같은 불공정무역에 의한 무역적자 심화에 따른 것으로 주장하면서 무역적자 해소를 천명했다.

이에 미국은 2018년 3월 중국에 대해 ‘통상법(Trade Act of 1974)’ 301조를 발동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7월에는 5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2,0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고, 이러한 중국의 맞대응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9월에 부과한 2,000억 달러의 수입품에 대한 10%의 관세를 2019년부터 25%로 인상하겠다는 재보복 관세부과 방침에 나섰다. 비록 2020년 1월 15일 18개월 간의 무역분쟁을 완화하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하며 일단락되었으나 중국이 대(對)미 수입을 확대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중국의 추가수입 실적은 예정된 목표액의 전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따르면²⁵⁾, 중국은 2019년 1월부터 2년간 서비스 379억 달러, 공산품 777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에너지 524억 등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및 모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하였고, 미

24) 박병광, 2018 중국외교 3.0: 시진핑 시기의 변화와 지속, 중국학, 제65집, pp. 379-401.

25)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on January 15, 2020.

국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도 약속했다. 하지만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중국정부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2단계 합의의 남은 과제로 남겨졌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노선의 배경에는 대외적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경제 구도개편에 대한 우려와 대내적으로는 공약실현을 통한 정치적 입지를 공고하게 하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 모두 중국과 깊게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은 중국과의 교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규모가 세계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중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에 미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은 단순히 관세를 부과해 통상불균형을 완화려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데, 중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의 핵심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첨단산업과 과잉생산 문제를 갖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압박과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즉,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중 무역분쟁의 실체가 첨단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는 ‘기술전쟁’인 것이다. 사실 미국은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줄곧 대(對)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보여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를 아무리 강조해도 무역수지는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무역분쟁이란 이름 아래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미래의 기술패권과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를 장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무역분쟁에서는 서로가 패자일 수 있지만 첨단기술 경쟁력을 다투는 하이테크 분쟁에서는 기술을 선점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코로나19 책임론

2019년 말 우한(武漢)의 안과 의사인 리원량(李文亮)은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사스(SARS) 확진환자 7명이 발생했다는 병동문건을 동료의사들이 소통하는 SNS에 올렸고, 이 글이 인터넷에 급속히 퍼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출현이 최초로 세상에 알려졌다. 중국당국은 춘절 기간 지역경기 활성화 및 3월에 개최될 예정인 ‘양회(兩會)’ 등의 이유로 관련 보고를 유언비어로 치부하였고, 사실이 아닌 의견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리원량을 조사했지만 얼마 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WHO는 2020년 1월 9일 원인불명의 폐렴 병원체를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로 규정하고 사람 간 감염이 확인되면서 중국이 1월 23일을 기점으로 우한시를 비롯한 후베이(湖北)성의 주요 도시 봉쇄 및 이동 제한 등의 강력한 전염병 대응조치를 실시했지만 전염병 방역의

전염병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결국 중국의 은폐로 인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전파된 것이므로 중국의 책임이 명백하다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 보고서²⁶⁾는 G7 국가들이 중국에 약 6조 3,0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독일이 중국에 배상한 청구금액인 1,490억 유로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며 최종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임을 시사한바 있다.

이에 중국은 대내외에서 제기되는 코로나19 책임론을 반박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중국당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투명하고 공개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와 코로나19 정보를 공유해왔고, 미국에는 1월 3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했다며 ‘중국책임론’을 부인했다²⁷⁾. 또한,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방역 지원과 물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을 왜곡하려는 그 어떤 개인이나 세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주장에 대해 방역 실패 책임을 중국에 덮어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미중 간 패권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즉, 미중 무역분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대결 하의 냉전체제와도 다른 양상으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최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관계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4. 홍콩 민주화 시위 및 소환법 통과

2019년 3월 홍콩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인 이른바 ‘송환법’ 추진을 계기로 시작된 홍콩 시위 사태가 반(反)중국 및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로 확대되었다. 과거 2014년 9월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79일간 이어졌던 우산혁명을 뛰어넘어 홍콩 역사상 최장, 최대 규모의 반중 민주화 시위로 전개되고 있는 홍콩 시위 사태는 친중파 지도자인 캐리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9월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하며 한발 물러서는 듯했으나 올해 5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을 표결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미중 갈등의 수위가 치솟게 되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26) Matthew Henderson and others, “Coronavirus Compensation? Assessing China’s Potential Culpability and Avenues of Legal Response,” Henry Jackson Society, 5 April 2020.

27) 尚绪谦。2020 联合国大会上，中国代表严厉驳斥！新华社 9月13日

사태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북핵문제와 대만문제, 무역분쟁, 남중국해 갈등, 코로나 진원을 둘러싼 책임소재 등에 이어 미중 간 또 하나의 추가적인 전선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표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발의한 홍콩의 인권을 탄압한 중국 관료들을 제재하는 법안 및 홍콩을 특별지위에서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한 지위를 누려왔다. 미국이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관세와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하게 대우하면서 글로벌 도약을 꿈꾸는 중국기업들이 특별지위를 가진 홍콩에 지사를 마련해 미국 및 유럽의 투자 기회를 얻는 등 많은 혜택을 받아온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정부의 ‘국가보안법’ 결의안 통과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홍콩의 반체제 인사를 강제로 중국 본토에 보낼 수 있다는 우려에 ‘송환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2019년 내내 몸살을 앓았지만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방역으로 인한 시위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 틈을 타서 중국이 홍콩 내정 개입과 홍콩 내 반체제 활동 금지 및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며 본토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홍콩을 더 이상 자율에 맡기지 않겠다는 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인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홍콩은 외국기업들의 중국 진출 발판이자 중국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 활용되어 왔다. 중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있는 홍콩에는 약 1,500여 개의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는데, 미국은 중국의 ‘국가보안법’ 통과를 계기로 홍콩에서 철수하거나 싱가포르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를 떠받치는 ‘달러페그제’를 무너뜨리고 달러가 유출되도록 해서 홍콩경제를 마비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에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장예쑤(張業遂)이 대변인²⁸⁾은 “국가안보는 국가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곧 홍콩 동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홍콩의 일국양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고, 주미중국대사관은 미국의 중국 공무원들의 미국 입국비자 제한 및 각종 제재에 대해 ‘홍콩에 대한 중국정부의 모든 조치는 중국의 내정으로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어떠한 외국의 중국내정에 대한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국가보안법’ 제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게나 부여된

28) 叶攀. 2020. 张业遂：维护国家安全是包括香港同胞在内的全国各族人民的根本利益所在. 中国新闻网 5月 21日

고유한 주권행사라는 점을 분명히하며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²⁹⁾.

따라서 미중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발생한 홍콩사태는 상호 이견 등이 절충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중국은 홍콩문제를 체제위협으로 간주하는 반면, 미국은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절충과 타협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미중관계 변화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시진핑 체제 및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패권경쟁은 한층 더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은 그 경쟁의 서막일 뿐이며, 이를 말미암아 중국의 지속적 성장이 어렵게 되었음은 물론 중국경제의 위기가 코로나19와 함께 중국 사회 전 영역과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서 언급한 여러 사안들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사소한 충돌로 끝날지 전면적인 대결로 치닫게 될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29) 张申。 2020. 中国驻美国使馆发言人就美方宣布因涉港问题对相关中方官员实施签证限制措施发表谈话。 新闻中心 6月27日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8년 동안 국내에 보도된 미-중 간 주요 이벤트를 기반으로 두 국가 간 갈등, 협력관계를 수치화 하였다. 두 강대국의 관계를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두 국가 간의 관계를 수치화하여 시간적, 공간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물론, 국가 간의 무력 분쟁 수, 동맹 또는 양자조약 체결 수, 혹은 무역량 등의 지표를 통해 갈등, 협력관계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기사에 보도된 양국 간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 비난의 정도 등을 좀 더 섬세하게 측정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단순화된 지표보다는 한층 정교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분석 결과 미중관계는 시진핑-오바마 시기(2013-2016)와 시진핑-트럼프 시기(2017-2020)가 대립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립에 가까웠던 오바마-시진핑 시기(2013-2016)와는 달리 시진핑-트럼프 시기에 들어서면서 미중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슈별 평화관계를 통해 트럼프시기 미중의 갈등관계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데, 트럼프-시진핑 시기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는 크게 2018년 미중 무역전쟁과 2020년 코로나 중국 책임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언론에 보도된 미중 관계를 분석하고 있기에 우리나라 정책 연구에 대해서도 확장성을 지닌다. 엄밀히 말해, 본 연구는 ‘한국 언론에 비친’ 미국과 중국의 갈등, 평화관계에 관한 것이며, 이는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미중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미국-중국의 평화관계 추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외교정책, 대중 외교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미-중관계의 온도차에 따라 대북관계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등 다양한 연구 질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VOA 뉴스』

박병광, 2018. 중국외교 3.0: 시진핑 시기의 변화와 지속, 중국학, 제65집, pp. 379-401.

Azar, Edward E. 1980. “The Conflict and Peace Data Bank (COPDAB) Project.”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4(1): 143-152.

Goldstein, Joshua S. 1992. “A Conflict-Cooperation Scale for WEIS Events Data.”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6(2); 369-385.

Henderson, Matthew and others, 2020. “Coronavirus Compensation? Assessing China’s Potential Culpability and Avenues of Legal Response,” Henry Jackson Society, 5 April 2020.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20.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on January 15, 2020. <https://ustr.gov/countries-regions/china-mongolia-taiwan/peoples-republic-china/phase-one-trade-agreement/text>.

Statista, <https://www.statista.com/chart/15199/us-chinese-trade-war-escalates/>.

Sutter, Robert. 2017. “Barack Obama, Xi Jinping and Donald Trump—Pragmatism Fails as US-China Differences Rise in Prominence.” *American Journal of Chinese Studies*. 24(2): 69-85.

The White House. 2011. “U.S.-China Joint Statement.”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2009.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July 27, 2009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remarks-president-uschina-strategic-and-economic-dialogue>.

World Bank Data. n.d. GDP(current U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view=chart>.

World Bank Data. n.d. Gross domestic product 2019, PPP. https://databank.worldbank.org/data/download/GDP_PPP.pdf.

尚绪谦. 2020 联合国大会上, 中国代表严厉驳斥! 新华社 9月13日

叶攀. 2020. 张业遂: 维护国家安全是包括香港同胞在内的全国各族人民的根本利益所在. 中国新闻网 5月 21日

张申. 2020. 中国驻美国使馆发言人就美方宣布因涉港问题对相关中方官员实施签证限制措施发表谈话. 新闻中心 6月27日

程宏毅、杨丽娜. 2012. 习近平: 承前启后继往开来 朝着中华民族伟大复兴目标奋勇前进 人民网 11月30日

周楚卿、惠梦. 2013. 习近平: 在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上的讲话新华网 3月 17日

门洪华, 构建新型国际关系: 中国的责任与担当, 世界经济与政治, 2016年 第3期, pp. 5-6.

魏政, 2013 杨洁篪《求是》撰文论中国外交: 开局体现战略性, 东方网 8月 16日.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using big data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how the peac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unfolded throughout the year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peace relations revealed in the Korean media from 2013 to 2020. During the period, the US was led by the Obama (2nd term) and Trump administrations while China was led by Xi Jinping. The trend in peac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tates were investigated using the Goldstein Scale. We have discovered the followings through the analysis. First, compared to the Xi-Obama period (2013-2016), the US-China relations during the Xi-Trump period (2017-2020) deteriorated significantly. Second, after dividing the trend of US-China relations into political relations, economic relations, and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deteriorated sharply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han the Obama period. Regarding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positive relations were maintained during 2017-2018 while the relations became almost neutral in 2019-2020.

In the second half of the study, we tracked the factors that caused changes in the cooperation-conflict relations between the two states. During the Xi-Obama period, the ten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were not significant because the two states tried to avoid conflicts.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Xi-Trump period, economic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sharpened due to the trade war that lasted for 21 months since 2018. Tensions between the two have escalated further in 2020 due to conflicts over the COVID-19 blame game and pro-democracy protests in Hong Kong.

Keywords: US-China relations, big data, Goldstein scale, US-China trade wars, COVID-19 blame game